

전국 4대강 수질 자동 측정한다.

환경부는 지난 5월 17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수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동측정망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기존 2개소와 현재 공사 중인 9개소 외에 9개 장소에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해 올해 모두 20개 장소에서 수질을 자동 측정할 계획이다.

수질자동측정장치는 한강 6개소, 낙동강 6개소, 금강 5개소, 영산강 3개소 등 모두 20개소에 설치된다.

환경부 수질자동측정망은 측정되는 수질 지표를 실시간(real-time)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에 온라인으로 연결, 수질 변화 상황을 곧바로 중계한다.

특히 환경부는 이를 통해 폐놀, PCB, 납, 수은 등 미량으로도 수질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특정유해물질이 발견되면 5분 이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올해부터 2001년까지 사고우려가 높은 공단 밀집 지역 등의 수질감시초소를 현재 15곳에서 30곳으로 연차적으로 늘리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과 공조체계를 재점검해 정비키로 했다.

공장폐수 처리 획기적 신기술 개발

한 폐수처리 전문 중소기업이 공

장 폐수를 비롯한 각종 폐수를 획기적으로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신 기술을 개발했다.

서울 대정기계기술(주)은 지난 5월 16일 전남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내 한라필프제지(주)에서 제지업계 관계자와 목포지역 환경 단체회원 등 5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기술에 의해 개발한 오.폐수처리시설 시험 가동식을 가졌다.

1일 20t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험 제작된 이 시설은 '전기 분해 공법 오.폐수 처리시스템'으로 대정기계는 지난 93년부터 5년동안 각고의 노력끝에 개발해 낸 것이다.

대정은 이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2천ppm에 달하는 한라제지 공장의 폐수를 이 기계로 처리해 COD를 10ppm 이하로 줄였다.

대정은 "이 처리 시스템은 부유물질(SS)과 암모니아는 거의 배출되지 않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 정화 처리된 물을 재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찌꺼기)도 필터로 중금속을 제거했기 때문에 흙과 톱밥, 미생물 등을 섞으면 곧바로 퇴비화 수 있어 2차 오염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오.폐수를 원수 탱크에서 수소이온(PH) 조정조-1, 2, 3, 4차 전해조-산소 기폭조-활성탄조 등 7개 공정을 거치면서 전기 분해해 가스 상태로 증발시켜 유해물

질을 제거하고 남은 슬러지를 필터로 정화하도록 돼있다.

대정기계기술 박根元부사장은 "현재 오.폐수 처리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단일 방법으로 처리가 어려운 물질은 3가지 방법을 적절히 혼합해 사용되지만 처리 비용이 많이 들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나 이 시스템은 처리 비용과 슬러지 발생량이 기존 방법에 비해 3분의 1정도 적고 2차 오염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다.

대정은 이같은 신기술을 아용, 경기안성의 대규모 양돈장인 '다비농장'에 1일 2백40t의 오, 폐수 처리 시스템을 설치키로 가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여천공단주변등 오염도 기준 이하

국립환경연구원은 지난 5월 16일 여천공단, 주변지역 하천과 폐기물 매립장 주변 토양에서 수은, 아연, 납 등 중금속과 폐놀을 검출했으나 오염우려 기준을 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연구원은 이날 오후 여천공단 환경오염 대책을 위한 오염실태 정밀조사 결과 최종 평가회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연구원은 하천과 하천 흙탕물에서 수은, 아연이 검출됐으며 특히

하천밀바닥찌꺼기에 대해서는 용출 시험과 독성시험을 통한 위해성 확인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하천대부분의 오염은 정화되지 않은 생활오수 유입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 유해대기오염물질인 부타디엔, 노말헥산, 염화비닐, 벤젠, 디클로로에탄 등은 1~2군데 측정지점에서 위해성 평가를 필요로 하는 농도가 검출됐을 뿐 1차 조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연구원은 그동안 공장 조업률 하락과 환경투자의 증가로 상당 수준의 환경개선 효과가 확인됐으며 앞으로 환경개선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증대되면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해물질 유출사고 등 환경 사고가 일어날 경우 공단과 인접한 일부지역이 피해우려 범위안에 위치해 있어 이에 대한 정밀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형 공공건물에 절수형 설비 의무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대형 건물과 공공건물 등을 지을 때는 절수형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또 전용면적 30평 이상의 아파트 욕실에도 물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절수형 수도꼭지와 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5월 19일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신축건물에 물소비를

줄일 수 있는 변기와 자동수도꼭지 등 절수형 설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올 상반기 안에 고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빠르면 올해부터 대규모 업무용 빌딩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건물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일정 규모 이하 중소형 건물과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는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건축업자가 이를 따를 때는 관련부처와 협의해 세계 또는 용자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좌변기와 소변기는 현재보다 용량을 줄이고 그대신 세척력을 높인 전진국형 규격을 정해 오물 세척에 따른 오폐수 발생량을 줄이기로 했다.

수도꼭지는 많은 이용자가 수도물을 틀어놓고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손을 대면 물이 나오고 손을 떼면 잠기는 전자감응식 자동수도꼭지를 의무 설비로 지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중수도 시설 설치 등 수도물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무화하거나 권장사항으로 정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 계획에 따라 모든 자원의 생산과 소비에 절약형 및 환경친화적 요소를 가미할 계획”이라며 “절수형 설비는 수도물 사용량을 줄여 오폐수 발생을 억제할 뿐 아니라 수도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화학물질 사용도 한꺼번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유업계 환경산업에 잇따라 진출

대표적인 환경오염유발물질인 석유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정유업계가 최근 환경산업에 잇따라 진출, 사업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업계에 따르면 유공은 유그린 사업팀을 통해 지난해 12월 독자기술로 개발한 경유차량매연연과장치 1천1백86대를 청소차량용으로 서울시에 납품한데 이어 이달들어 일본 자동차정비업체와 접촉을 갖고 일본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공은 내년까지 3백억원을 투자해 연간생산량 15만대 규모의 경유 매연저거장치 양산 공장을 건설, 사업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유공은 지난해말 생산기지가 있는 울산지역에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자연생태계공원인 ‘울산 대공원’ 건설에 1천억원을 투입하고,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제거하는 ‘냄새없는 공장’ 조성에도 8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한화에너지는 이달초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도를 정밀 평가하고 미생물 계면활성제를 이용해 오염된 토양을 단시간에 복원할 수 있는 ‘생물학적 복원기술’을 개발하면서 환경산업 진출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한화에너지는 14명으

로 구성된 환경산업팀을 발족시켜 석유제품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주유소 및 저유소, 산업체,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환경컨설팅 및 복원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LG칼텍스정유도 자사의 중앙기술연구원을 통해 올초 자석원리를 이용해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환경산업에 뛰어들었다.

LG칼텍스정유는 이 기술을 이용하면 해상에 유출된 기름의 95% 이상을 제거할 수 있고 처리비용도 저렴해 경제성이 크다고 판단, 국내 특허를 출원하는 한편 사업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 수립

경남, 창원시는 지난 5월 19일 환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심의할 환경보전위원회와 환경개선 재원 마련을 위한 환경기금을 설치키로 했다.

창원시 '그린폴리스 창원 21' 추진위원회는 이날 창원시 환경기본조례안과 창원환경선언문을 확정하고 이달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공포함과 동시에 대대적인 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추진위원회가 확정된 환경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보전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환경보전위원회는 이 환경기본계획 책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환경시책 전반에 관한 사항, 기타 환경행정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시 환경조례안은 또 지역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환경보전 기금을 설치하고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은 물론 기술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환경조례안에서는 시가 지역 환경실태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해야 하며 시민들에게 환경현황과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해 매년 환경백서를 발간토록 했다.

제조업체 재활용품 처리 의무화

빠르면 하반기부터 제조업체나 수입업자들이 재활용품을 직접 활용하거나 최종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재활용품 수거량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재활용되지 않거나 방치되는 양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자 부담원칙에 따라 재활용품의 활용 및 최종처리책무를 생산자나 수입업자에게 맡기는 통합재활용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통합재활용체계 구축에 따른 용역사업을 완료해 공청회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이미 이와 유사한 제도가 도입돼 재활용품 처리는 생산자와 수입업자가 맡고 있다.

환경부는 한편 수입업체를 포함한 해당업체들이 직접민간업체에 맡기거나 자원재상공사측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재활용품 분리 배출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재활용품 가격 하락, 재활용품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집하장에 보관되는 재활용품이 폭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말 현재 재활용품 집하장에 보관중인 재활용품은 2만7천20t으로 1년전의 1만4백99t에 비해 무려 1백57%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 업체들은 새로운 부담을 주는 이같은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이미 생산자 부담원칙에 따라 재활용 처리업자가 생산자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도 재활용품을 적극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종량제 실시 2년간… 재활용품 28.5% 증가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2년동안 쓰레기 발생량이 약30% 줄어들어 연간 4천5백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95년부터 전국 2백32개 시·군·구별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결과 실시 전해인 지난 94년 하루 평균 4만9천1백91t에 달했던 생활폐기물은 지난해 3만4천7백26t으로 29.4%가 줄어든 반면 재활용품 배출량은 8천9백27t에서 1만1천4백68t으로 28.5%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또 종량제 시행 2년만에 1인당 일일 쓰레기 발생량은 1.3kg에서 1.01kg으로 감소해 선진국 수준(영국 0.96kg, 독일 0.99kg, 일본 1.12kg)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와 5개 광역시의 1인당 배출량은 1.1kg, 9개도의 평균 배출량은 0.9kg로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감소율이 높았으며 계절적으로는 봄·겨울보다 과일·채소류 쓰레기가 중점 발생하는 여름·가을철의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쓰레기 상태별 비중을 보면 음식물류는 31.4%에서 35.2%로, 플라스틱류는 5.0%에서 13.1%로, 종이류는 21.5%에서 26.4%로 각각 증가한 반면 연탄재는 9.5%에서 6.7%로, 금속·목재류는 9.8%에서 7.9%로, 기타는 23.1%에서

10.8%로 각각 감소했다.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가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분 함량이 늘어나 폐기물의 발열량(kg당)은 94년의 1천7백66kcal에서 지난해에는 1천5백20kcal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쓰레기 처리방법별로 보면 재활용이 지난 94년 15.8%에서 지난해 24.8%로 늘어났고 소각도 3.5%에서 6.4%로 증가한 반면 매립비중은 80.7%에서 68.7%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연간 쓰레기감소량이 평균 4백35만4천t에 달해 수거·운반·처리비가 줄어들고 재활용품의 경제적 가치를 감안할 때 연간 4천5백억원의 절감 효과를 주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매립지도 여의도면적의 3분의 1정도인 25만평을 덜 사용하게 됐다는 것.

환경부는 그러나 봉투값 인상으로 5인가족 기준 가구당 수수료가 2천5백원에서 3천3백원으로 늘어나 시민 부담이 늘어난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예산중 수수료 비중이 높아져 자립도는 13.6%에서 23.4%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개선돼야 할 과제로 ▲찍는 비닐 등 대체봉투 개발 ▲재활용품 혼합수거 방지와 적체 해소 방안 ▲음식물 쓰레기 감량·사료·퇴비화 기술개발 ▲점증하는 사업장 쓰레기 감량화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근절 ▲폐의약품·화장품·형광등 등 유해 폐기물 관리대책 등

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물을 이용한 수질정화 기술개발

근래 상수원을 비롯한 호소수에서 대량으로 발생하여 정수장에서 정수장애풀 일으키고 이취미를 유발하여 먹는물의 수질을 악화시키며, 연안에서 적조를 유발하여 막대한 어업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조류는 이들의 영양물질이 되는 질소와 인이 수역에 다량으로 유입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발생된 조류는 사멸한 후 분해되는 과정에서 물속에 있는 산소를 소비하여 수질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어서, 이들의 정화처리가 매우 시급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질소와 인은 산업폐수, 생활하수는 물론 농경지를 비롯한 비점오염원에서도 다량으로 배출되어 이들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발생원도 산재되어 있어서 이들을 제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현재까지 질소와 인 등 영양물질 제거하기 위해서는 물리·화학적 처리와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나,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기술적으로도 해결되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다.

따라서 국립환경연구원 한강수질검사소에서는 수생식물을 이용하여 물속에 포함된 질소와 인은 물론 유기성 오염물질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수생식물을 이용하는 경우, 식물이 성장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질소와 인을 흡수 제거하고, 뿌리부근에 다량으로 서식하는 미생물이 유기성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자연정화능을 이용하면, 정화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비가 물리 화학적 처리에 비해 10분의 1의 수준으로 기존의 처리방법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환경친화적 처리방법으로,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는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도 전환시키면서 2차 오염도 방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국립환경연구원은 한강수질검사에서 200㎡의 식물 정화지를 설치하고 경기도 양평군 양서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유입시켜 수생식물을 이용한 실용화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식물정화지에서는 부레옥잠, 애기부들, 꽃창포, 미나리가 재배되고 있는데, 총질소가 17.0mg/l, 총인이 0.70mg/l, 부유물질이 40mg/l인 유입수를 정화지에 1~2일간 체류시켜, 총질소는 90%, 총인은 47%, 부유물질은 82%의 정화효율을 나타내어, 정화지 용적 1㎡당 하루에 질소는 2.84kg, 인은 0.35g을 제거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4㎡의 식물 정화지가 한 사람이 하루에 배출하는 오수중에 포함된 인을 모두 제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이와 같은 수질정화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설

계인자를 표준화하여 보급할 계획으로 있다. 동기술은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오수처리장은 물론, 공공수역 주변의 음식점, 재래식 처리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군부대 등의 생활하수, 양어장 배수, 비점 오염원인 영세 농축산지의 배수처리 등에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제21” 작성요강 개발보급

환경부에서는 금번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방의제21」 작성요강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보급하게 되었다.

「지방의제21」을 작성하는 과정은 지역주민, 시민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구성원이 폭넓게 참여하여 자기지역의 환경문제를 분석, 진단하고 그 지역의 특성을 발견하여 21세기를 향한 바람직한 미래비전을 제시, 이의 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구성원들이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각 구성원의 행동규범과 실천강령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지방의제21」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의 제28장에서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제21」을 1996년까지 채택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대부분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일부에서 현재 작성중이다.

그러나 「지방의제21」이 우리나라

에서는 최초로 작성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경험과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이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모방하여 작성되는 예가 많기 때문에 그 실행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전문기관(한국환경기술개발원)에 용역을 주어 4개월여의 연구기간을 거쳐 금번에 완료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개발, 완료된 작성요강은 ① 광역자치단체(대도시지역), ② 도농통합시, ③ 공업도시, ④ 일반도시, ⑤ 군지역(농촌, 어촌, 산촌)의 5개 모델로서 「지방의제21」의 개념 및 성격,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지방의제21」 작성요령, 모델 유형별 고려사항, 국내외 추진사례 등을 자세히 담고 있어 「지방의제21」을 작성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 환경계획(지방의제12)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지역환경보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된다.

5개 유형별 작성모델과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 ① 광역자치단체 「지방의제21」
 - 광역자치단체의 주된 임무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와 이들간의 조정에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제21은 계획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조되어야 함.
 -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원칙

을 강조하는 데 보다 초점을 두며 특히 도의 경우에는 개발과 환경에 대한 지역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예방체제를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둠.

- 추진체계는 각계 대표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나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자치단체 부설연구소나 여타의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의제21」의 초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광역시는 자치구 대표, NGO, 기업, 학술, 청년 여성단체, 노동자 및 노동조합 등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인근 자치단체 주민이나 대표를 참여시킴.

② 도 농통합시 「지방의제21」

- 도 농통합시의 경우에는 도시 지역과 농촌지역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제하에서 서로의 기능을 교환하여 지역 전체적인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지속가능한 정주체계의 확립방안 검토 - 특히 농촌주민을 위한 서비스 공급체계 등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종 개발과 보전의 조화방안 강구

③ 공업도시 「지방의제21」

-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해결을 우선 고려하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비전을 제시하면서 공단과 지역주민간의 협조체계 발굴에 초점을 맞추는 의제

개발 필요.

④ 일반도시 「지방의제21」

- 일반도시는 주요 보유기능 및 자연특성에 따라 역사 문화도시, 군사도시, 항구도시, 관광도시, 전원도시, 신도시 등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기능을 특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전략 모색 필요-지역 공통적인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 환경에 대한 비전 외에도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미래의 비전 포함.

예를 들면 수원시, 청주시, 전주시의 경우, 「21세기 교육문화도시 르네상스구상」, 과천시, 의왕시 등은 「자연과 녹음이 우거진 쾌적한 환경 도시」, 태백시의 경우, 「새로운 고원문화를 창조하는 관광도시」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미래상을 구체화시키는 작업 필요.

⑤ 군지역(농산어촌) 「지방의제21」

- 군지역에서의 지방의제21은 시급도시 보다 다양한 특성을 지니게 마련인데 그 목표는 친환경적 농업방식의 도입,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환경보전형 임업 등 생산체계의 환경성 증진을 목표로 하여야 함.

농 어촌지역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수산업의 확대 보급과 유기농법 등 생태보전형 영농방식의 개발 보급 등에 관한 대책이 「지방의제21」의 핵심이 되

어야 함.

산촌지역의 경우에는 지역 토착품의 상품화와 생태관광의 개발로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전략과 행동강령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생활측면에서 환경관리, 보다 안전한 도로교통체계, 생태환경의 보전과 활용 등 농촌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행동계획을 동시에 추구 농촌쓰레기의 감소, 하천오염의 감소, 자전거도로의 개설, 안전한 도로 통행의 보장, 대중교통수단의 확보, 농산 어촌의 자연생태환경의 보존, 농산 어촌 경관의 보존, 생태관광의 개발 등에 역점을 두는 행동계획 수립이 요구됨. ◀

